

조선민족청년단과 한국의 근대민주주의국가건설*

이택선** | 서울대학교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민족청년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민주주의 국가건설과정을 고찰해보는 것이다. 해방 직후 한국의 상황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철저히 피폐되어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양대 축인 지배계급으로서의 헤게모니를 지닌 부르주아와 정치적 정당성을 지닌 시민사회가 모두 부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기를 원하면서도 한국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주어야만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은 자신들의 철수 이후에도 민주주의 체제가 한국에 존속하기를 희망하면서 조선민족청년단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시간 내에 미국의 근대국가의 기준이 한국 사회 전체로 빠르게 보급되었다. 조선민족청년단과 관련되었던 보수, 진보세력들은 1960년대 이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민주화라는 국가건설의 과제를 성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비록 미국 측의 희박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시작점이 되었지만 단기간에 한정되었으며 이후에는 한국 측의 내적 역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발전 등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지도계급으로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한국에 도입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여전히 근대 국가건설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주제어: 조선민족청년단, 근대민주주의국가, 시민사회, 정치적 정당성, 한미관계

*유익한 제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논문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신 이철순, 정일준, 전재호, 김상돈 교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상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etacksun@naver.com

I. 들어가며

1945년 해방 직후 이루어진 미군정의 진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미국 식 제도를 이식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전파시켰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국가건설과정과 국가성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새로운 정치, 행정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원조들을 통해 한국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근대화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통주의 계열의 연구들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주의 정착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수정주의 계열의 연구들은 미국이 한국의 근대민주주의국가건설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더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본 연구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정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첨예한 시각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민족청년단을 중심으로 한국의 근대민주주의국가건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철수 이후에도 미국식 근대국가건설의 기준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보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식 제도의 이식에 앞장서는 한편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선민족청년단 지원에 힘썼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의 근대국가 기준을 학습하게 된 세력들은 점차적으로 모방의 단계를 벗어나 한국의 상황에 맞는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의 국가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와 유착하여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하고 지도계급으로서의 헤게모니를 지닐 수 없었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방 직후 급작스럽게 도입된 자유민주주의 역시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접목되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장이다.

II. 기존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1. 기존연구의 검토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하여 고찰한 기존의 연구들은 무수히 많았지만 이를 집대성하고자하는 노력은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1992년에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통해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서구학계의 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한 담론들을 소개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 적용하려고 하였던 국내 사회학, 정치학 연구자들의 시각을 한 자리에 모아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해방 직후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성립과 근대국가 건설과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려고 하였던 박찬표(2007)는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국의 국가건설에 관련된 기존의 방대한 정치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하고 요약, 소개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박찬표 2008).

한편, 조선민족청년단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출범까지의 좌, 우익 청년단체의 동향을 살펴본 김행선(2004)과 이경남(1989)의 연구를 필두로 임종명(1995; 2012)이 조선민족청년단의 전체적인 역사와 미군정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범석의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극우 청년단체로만 간주되어 왔던 조선민족청년단의 진면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후지이 다케시(2012)가 기존의 모든 연구들을 집대성하여 발표함으로써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조선민족청년단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특히, 후지이 다케시(2012)는 파시즘이 조선민족청년단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조직의 형성과 몰락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해방8년사를 복원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1953년 조선민족청년단 해체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근대국가건설의 과제를 담당하게 된 조선민족청년단 관련 세력들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할과 동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2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검토의 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먼저, 1차 사료의 경우 영문의 경우에는 미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의 *Foreign Relations, 1961-1963, Volume XXII*(1991)와 주한미육군사령부(HQ, USAFIK)의 일일정보보고(*G-2 periodic report*)(1989) 5권과 주한미육군사령부의 주간정보요약(*G-2 weekly summary*)(1990) 4권, 그리고, 정병준이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를 통해 수집, 간행한 미군정 CIC 보고서(1996) 중 이범석 보고 파일을 조선민족청년단에 관한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특히, 이범석 보고 파일은 조선민족청년단이 공식해체된 1953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를 지속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족청 계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신진회와 공화당 등의 창당시도를 지적하는 한편 이범석이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에 족청잔여 세력을 참여시키면서 자신 역시 부통령과 국회의원직에 출마하고 1960년 대통령 선거에도 족청 관련세력을 활용하여 대통령직에 도전하려고 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련 측 문서는 박종효 편역(2010) 『러시아연방외무성대한정책자료 I-II: 1917~1980년 남, 북한 자료 6·25 한국전쟁관련 끄레물 극비자료』와 국사편찬위원회(2003)의 『러시아연방 국방성 중앙문서 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국문의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대한민국 편』 중 “자료 대한민국사”와 “한국근현대신문자료” 등의 기존 1차 사료들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민족청년단의 초창기 단원이거나 관련세력이었던 백두진과 송정범, 부완혁, 서영훈, 김정례, 이희호, 백낙준 등이 남긴 기록을 채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서영훈, 김정례, 이희호, 백낙준 등 주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계에서 활동하였던 이들은 조선민족청년단이라는 공통요소를 중심으로 친밀감을 지니고 협력하기도 하였음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2차 자료의 경우에는 주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건설에 관한 국내, 외 정치외교학 분야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III. 이론적 틀

1. 민주주의의 국가수립과 시민사회의 상관관계: 해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외 학자들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도입과 발전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다. 먼저, 키인(John Keane 1988)은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국가 이외의 전 사회영역으로 제시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코헨과 아라토(Cohen and Arato 1992)는 국가와 경제만을 매개하는 사회영역으로 제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시민사회를 통제하여 국가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낮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의 민주적 성격은 약화된다. 반면,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해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 활동에 대하여 많이 통제할 수 있으면 국가체제의 민주적 성격은 그만큼 강화된다.

특히, 시민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사회가 근대국가의 정치적 지배를 ‘동의에 의한 지배’ 혹은 ‘헤게모니적 지배’로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를 국가의 개념에 포함시켜 국가개념을 확장시키고 있고 알튀세르(Louis Althusser) 역시 시민사회의 이러한 역할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모든 제도와 기구들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김세균 2005, 163-164).

결론적으로 이들의 연구들은 시민사회의 존재가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념적 자원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사회가 국가에 대하여 높은 자율성을 지닐수록 국가가 지니는 민주적 성격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후발 산업화 국가로 출발한 국가가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가 인위적으로라도 이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지원한 최근 30~40년간의 국가건설 사례들을 집대성한 랜드연구소의 연구 역시 민주주의 체제수립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의 존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Dobbins et al. 2011, 264-267).

2.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도입과 좌절: 국내 연구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국내 연구들로는 노재봉(1985)과 박상섭(1985a; 1985b; 2012), 박광주(1992), 그리고 이택선(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노재봉(1985)은 한국의 근대국가건설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수립의 과제가 차례로 3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박상섭(1985a; 1985b)은 노재봉의 지적을 토대로 근대국가의 건설과 민주주의 수립에는 부르주아와 이를 토대로 한 시민사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가에 관한 해외의 네오 맑시스트 연구들과 네오 베버리안 사이의 논의들을 모두 요약, 소개한 이후에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박상섭(2012)은 근대국가의 건설과정에서 이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이념적 자원과 헤게모니를 지니고 물적 자원을 책임지면서 공급적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르주아지라는 양대 축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한국의 경우 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회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거나 취약하였고 그 결과 서구의 시민계층에 해당하는 사회세력이 전혀 없거나 대단히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한참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해방 직후 한국의 상황에서는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부르주아와 시민사회가 결핍되어 있었다. 1945년 일본이 한국에서 쫓겨날 당시 일본이 한국을 부분적으로 공업화시켰지만 주로 전쟁목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토착 자본가의 성장은 억제되었고 독자적 경제 발전을 위한 유리한 상황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예컨대, 자본형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본가 계층이 형성될 수 없었으므로 국가건설을 위한 물적 기반을 책임지는 부르주아 계층과 이에 기반 한 시민사회 역시 형성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박상섭(2012)은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 세력은 경제적 기반은 갖추고 있었지만 장기간의 대일항쟁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었던 민족주의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므로 헤게모니적 지위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결과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수립된 보수연합 정권의 당사자들이었던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인 정당성의 상징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서로의 단

점을 보완해주는 불안한 연합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섭(1985a; 1985b; 2012)이 자유민주주의와 근대국가 수립에 있어서의 부르주아와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면 박광주(1992)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연관시켜 상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해방 당시 한국 사회의 사회계층은 無정형적이었으며 지배계급으로서의 ‘헤게모니’를 지닌 부르주아지도 없었다. 그는 서구사적 경험에서 시민사회는 ‘부르주아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시민사회의 물질 기반이 부르주아지에 의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물질 토대를 갖춘 시민사회는 헤게모니를 지닌 지배계급의 존재를 의미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물질 기반이 자생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했었던 한국 사회는 서구적 외양의 국가를 건설하면서도 국가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사회가 결여되어 있었다. 즉, 국가가 국가건설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부르주아지와 시민사회를 의도적으로 육성해왔기 때문에 부르주아지가 헤게모니와 정치적 정당성을 갖출 수 없었다는 것이다(박광주 1992, 352-353). 박광주(1992, 339)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설명들을 토대로 한국 국가의 성격의 결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아직 국가건설(State Building)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국민국가라는 사실이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 ‘국민국가’의 건설이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택선(2012)은 이들 논의를 수용한 후 한국의 경우 국가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거의 모든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의 기준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조선민족청년단을 통해 학습되고 전 사회로 보급됨으로써 신속한 국가건설이 가능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즉, 그에 따르면 조선민족청년단의 구성원들은 한국의 국가건설 진행 단계에 맞추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민주화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미군정은 한국 사회에 미국식 국가의 기준을 조선민족청년단을 통해 주입시키고 이를 한국 사회전체로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을 빠르게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물론, 이는 한국에서의 신속한 철수를 바랬었던 미국의 입장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미국은 해방 직후부터 전통적인 고립주의적 성향¹⁾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원령 해제(Schnabel 1996, 101-104) 등으로 인하여 세계 전략 속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한국²⁾

1) 이에 대해서는 아트(Art 2005, 337-383)을 참조할 것.

2) 이정식(2006, 163-164)은 1947년 4월 27일 ‘공동 전략 조사위원회’(Joint Strategy Survey Committee)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당시 미국의 재정에 한계가 있어 미국 방위에 있어서의 전략

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³⁾보다는 가급적 빠른 철수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된 이후 역시 마지못해 개입하면서도 개입자체를 선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1947년 7월부터 1948년 8월의 약 1년에 집중되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하기를 원하여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세력의 구축을 희망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조선민족청년단을 통해 미국의 국가기준을 훈련받은 30대 이하의 젊고 고학력을 소유한 인적자원들이 관계와 군부, 학계, 정계, 재계 등의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진출하였다. 먼저, 군부와 경찰 등으로 진출한 보수 세력들은 반공의 이념을 추종하면서 국가안보의 문제를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관계와 재계로 진출한 이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으로 활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계로 진출한 진보세력들은 시민사회의 중요세력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IV. 조선민족청년단과 한국의 근대국가수립과정: 국가안보, 산업화, 민주주의의 달성을 중심으로

1. 조선민족청년단의 탄생과 발전: 1946~1949년

조선민족청년단은 1946년 10월 9일 광복군 참모장 출신 이범석을 단장으로 발족되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당시, 조선민족청년단은 기존 우파 청년단체들의 단골 구호였던 반공 실력투쟁 대신 민족지상과 국가지상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한 강력한 민족훈련을 주창하고 있었다(조선일보 1946/06/05). 이범석은 공개적으로 테러 반대를 외치면서 조직 내 테러리스트를 제거함으로써 테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기존의 우익 청년단체들과 차별화

적 가치에 따라 국가별로 등수가 매겨졌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각각 13등과 14등을 기록한 일본과 중국에도 뒤처지는 15등이었다.

3) 하영선(1992, 21-26) 역시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사실상의 봉쇄정책이 1947년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를 피하였다.⁴⁾ 무엇보다도, 조선민족청년단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춘생과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와 참모장을 지낸 노백린의 아들 노태준이 지휘하고 있었던 광복군 제2지대를 주축으로 하여 결성되었다(이경남 1987/08/26).

당시 미 국무부의 중도파 후원방침에 따라 김규식을 지원하고 있었던 미군정의 입장에서 조선민족청년단은 이에 가장 부합하는 우익 청년 단체였다. 즉, 전술한 것처럼 한국민주당 등이 중심이 되거나 지원하는 극우 청년단체들은 민족주의적 대의명분의 정통성이 없었고 지나친 폭력행사로 인해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다. 실제로, 서북청년단 등 반공투쟁활동을 전면에 내세운 기존의 우익 청년단체들은 ‘파시스트의 전위조직’ 혹은 ‘한민당이 돈으로 고용한 외인부대’라는 미국과 한국 언론의 혹평에 시달렸다(이경남 1987/01/07). 결국, 미군정청 역시 이들에 대한 해산령을 내린 상태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극우 단체의 이미지가 적고 임시정부의 권위를 등에 업어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새로운 단체가 필요했다.

사실, 이범석은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였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다. 미국 외교관들에게 이범석은 다루기 어려운 구식 중국 군벌과 유사한 존재로 간주되어졌다(조용중 2004, 400). 1952년에 주한미국대리대사였던 라이트너(Allan Lightner)는 부산국회정치파동을 이승만의 면전에서 비판하자 이범석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악명 높은 중국식 호전가”(notorious Chinese warlord type of hatchet man)라는 말로 그를 평했다(조용중 2004, 198). 이렇게, 미국 관료들은 이범석을 호전적이라거나 장개석의 국부군에 가까운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조용중 2004, 130).

그러나 해방정국에서 그나마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우익단체는 임시정부 출신의 이범석과 이청천이 이끄는 조선민족청년단과 대동청년단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청천은 1947년 7월에 이범석보다 1년이나 늦게 귀국하였다. 아울러, 늙고 완고하며 영어도 거의 구사하지 못한 데다가 괴팍하여 한국인들의 신망마저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범석과 조선민족청년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은 조선민족청년단에 33만5000달러를 지급하여 지도자 양성학교를 설립하게 하고 정책고문으로 미군 대령 보스(Ernest E. Voss)를 파견하여 훈련을 도왔다. 미군정의 조선민족청년단에 대한 물질적 후원은 1947년 7월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됨에

4) USAMGIK, 이길상 편역, 1990, “National Economic Board,” 『미군정 활동 보고서』 5권, pp.218-220, No.29, February, 1948.

5) Ibid. 6권, p.204, No.31, April, 1948.

따라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범석(1994, 90)에서 이범석 자신이 1946년 500만 원이라고 진술했었던 조선민족청년단에 대한 미군정의 후원은 1947년 거의 4배 정도가 늘어난 1900만 원으로 급증하였다.

임종명(1995; 2012)에 따르면 미군정의 목표는 미군정장관 헬믹(Charles Helmick)이 미군정의 모든 부서장과 기관장, 그리고, 고문에게 보낸 ‘조선민족청년단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비망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조선민족청년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단기적으로 미군정의 남조선 안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장기적으로 남한의 지도세력으로 양성되는 것이었다.

먼저, 단기적인 지원 이유는 미군의 조기 철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1947년 7월 소련과의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전까지의 것이었다. 원래 하지(John Reed Hodge)는 조속한 미군 철수를 달성하고 대규모 미군철수에 따른 군사력 붕괴를 만회하기 위하여 워싱턴에 군대 창건을 건의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소련과의 협상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 미국정부가 반대하자 조선민족청년단을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목표는 미군 철수 이후에도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지도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술한 시민사회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헤게모니를 지닌 지도세력이란 다른 아닌 시민사회의 존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제의 착취로 인하여 철저히 수탈당한 한국 사회의 경우 일정 이상의 경제력을 지닌 부르주아 세력이 거의 전무하였다.

한국민주당 중심의 지주세력들은 경제력은 지니고 있었지만 민족주의적 정통성이 부재하여 헤게모니를 지닌 지도세력으로 시민사회의 형성을 주도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이들은 일본식 근대 국가의 기준에 물들었고 나이가 많아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기준을 단시간 내에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들의 기준을 단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30대 이하의 고학력자들을 조선민족청년단을 통해 집결시켜 교육시킴으로써 한국 사회 전체로 퍼뜨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한국에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주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구체화되고⁶⁾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철수할 수 없게 된 1946년 말부터⁷⁾ 시작되

6) 이에 대해서는 구대열(1995)을 참조할 것.

7) 이에 대해서는 박종효(2010, 232-233) “1947년 1월 30일: 하바롭스크에서 청취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에 관한 미 국무성 담당자와 특별대담 방송(샌프란시스코에서 녹음방송)”을 참조할 것.

어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된 1947년 7월부터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이미 1946년 말 경부터 소련과의 협상결렬을 감지하고 있었던 미국은 황급하게 한국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주고 철수하면서도 이 체제가 그대로 존속되기를 원하면서 1947년 7월부터 1948년 8월 말까지의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조선민족청년단을 차세대 지도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였다. 미군정의 지원에 힘입어 조선민족청년단은 창설 1년 만인 1947년 10월 경 19만9000명의 훈련생을 배출하게 되었고 1948년 가을 무렵에는 무려 115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다.⁸⁾ 즉, 조선민족청년단의 본격적인 활동 역시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한반도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미국의 목표가 좌절된 1947년도 9월부터 시작되어 1948년 초부터는 조직의 확대개편 작업이 본격화 되었던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민족청년단 훈련소 수료자들의 학력이다. 이들 중에서는 지금의 대학 졸업자들에 해당하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연령적으로는 대개 30대 이하로 이들이 시, 도, 군의 연고지로 내려가 지방 훈련소를 설치함으로써 조직이 단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다.

아울러, 좋은 시설과 과학적 커리큘럼, 그리고 고급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던 조선민족청년단은 기존의 우익 청년단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리고 이를 경험한 여타 우익청년단원들의 50% 이상이 조선민족청년단에 잔류하고 우수성을 선전함으로써 우파 청년단체들이 조선민족청년단 중심으로 흡수, 통합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이경남 1987/09/09).

그런데 조선민족청년단 급성장의 배경에는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받고 있었던 당시 청년들의 현실 역시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 역시 조선민족청년단의 일원이 되어 우익을 지지하지 않으면 공산당이라는 이분법적인 극우 단체들의 이념공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非정치노선과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었던 조선민족청년단은 좌익청년단원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우익진영으로 전향시키려고 하였다. 실제로, 이범석은 조선민족청년단 내의 좌익분자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경찰의 통보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좌익분자들을 소탕하겠으니 경찰은 간섭하지 말라고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소련문서는 이범석이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⁹⁾

8) CIC,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편, 1996, p.652, "Record Group 319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Investigative Record Repository(IRR) Box#327/ Case# XA531861 Pom Suk Yi."

9)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2003,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의 당내 정세에 대한 정보자료, 김영준," 『러

이에 따라 조선민족청년단이 조선민주주의청년동맹이나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등의 좌익 청년단체들의 은신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조선민주주의청년동맹은 미군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자 일부가 조선민족청년단으로 잠입해 들어가 자유롭게 활동하였다.¹⁰⁾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 지방의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청년동맹원들이 지부를 장악하고 조선민족청년단원으로 정식 등록하여 활동하기까지 하였다.¹¹⁾

2. 조선민족청년단의 좌절과 몰락: 1949~1953년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었던 조선민족청년단은 두 번의 위기를 통하여 좌절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첫 번째 위기는 1949년 1월 20일에 이승만으로부터 국무총리직과 조선민족청년단 중 하나를 선택받을 것을 강요당한 이범석이 당시 130만 단원을 거느리게 된 조선민족청년단의 자진해체를 선언한 것이다(이경남 1987/09/23). 두 번째 위기는 1953년 9월에 이승만이 내린 조선민족청년단 계열의 공식제거 지시로 인해 찾아왔고 이후 당시 400만 단원으로까지 규모가 급성장하였던 조선민족청년단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우선, 첫 번째 위기에 대해 살펴보자. 이승만은 이범석과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이 제헌국회 내에서 만만치 않은 세력을 형성하여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고 임시정부 세력과 결탁하여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같은 임시정부 계열의 우익 청년단체인 지청천의 대동청년단이 주축이 되는 우익 청년단 통합 운동을 전개하여 이범석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여운형의 도움으로 임시정부에 합류하였었던 이범석이¹²⁾ 김구 계열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에(이경남 1987/08/19) 이범석이 조선민족청년단을 주축으로 임시정부 출신 인사들과 공모하여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다. 당시 한국에 근무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은 이미 미군정 시절부터 이범석이 100만의 조선민족청년단 세

시아연방 국방성 중앙문서 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46~1947, Ⅷ. 러시아연방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72, 목록 614632, 문서철 41 8(1947년 11월 25일).

1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89, 5권, 224쪽, No.687(1947년 11월 18일).

11) HQ, USAFIK G-2 weekly summary 1990, 4권, 335쪽, No.111(1947년 10월 30일).

12) 이범석의 임시정부 입문은 여운형을 직접 찾아간 이범석 자신이 여운형과 상해까지 동행함으로써 이루어졌다(이경남 1987/08/12).

력을 바탕으로 이승만이 버금가는 정치세력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조선민족청년단은 제헌의회에서도 청구회를 배경으로 20여 개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에 대통령이 둘 있으며 진짜 대통령은 이범석이고 이승만의 명목상의 대통령에 불과하다”거나 “족청에 있던 광복군 장교들이 군에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소문이 세간에 퍼져 있었다(이경남 1987/09/09).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10월 1일에 “혁명의용군 사건”이 발생하자 이범석은 “이 사건은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몰락한 극우정객이 공산당과 결탁해 벌인 정치적 음모이며 국군 내의 주모자는 여수 연대장이었던 오동기”라고 주장하며 한국독립당 인사와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였다. 즉, 이경남(1989, 196-197)에 따르면 이범석은 임시정부 측 인사들과 공모하여 정권을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부인하고 대동청년단 중심의 우파 청년운동단체 통합운동을 거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반응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민족청년단의 1차 해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1953년 이승만이 조선민족청년단 계열을 공식사회 등에서 공식제거 할 것을 지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이승만은 1952년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해 부통령 김승수가 사임하고 자신이 탄핵되는 등의 정치위기가 발생하자 이범석을 내무부 장관으로 발탁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범석은 이승만의 친위세력으로 이승만을 옹호하며 야당 탄압에 앞장서 이승만의 의도에 부합하였다.

하지만, 곧이어 이범석이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을 바탕으로 이승만을 옹호하기 위하여 창당한 자유민주당의 부당수가 되고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게 되었다. 급기야 이범석은 이승만의 후계자로 자처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전부터 이범석을 견제하고 있었던 이승만의 의도와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또 다른 부통령 후보였던 함태영을 지지하여 이범석을 낙선시키는 한편 자유민주당과 국가기구 곳곳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국가공식조직의 권위를 위협하는 조선민족청년단 단원들에 대한 공식 제거에 나서게 된다.¹³⁾ 즉, 헨더슨(Henderson 2000, 226)이 지적한 것처럼 비공식 국가조직인 조선민족청년단이 전면에 등장하자 한국 정치가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분리되어 국가가 이중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공식 국가조직의 역할과 권위를 위협하여 국정운영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

13) CIC,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편, 1996, 648쪽, “Record Group 319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Investigative Record Repository(IRR) Box#327/ Case# XA531861 Pom Suk Yi.”

생하게 되자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힌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1953년 공식해산령 이후 한국 사회 전반으로 흩어져 한국전쟁으로 폐허화된 국가를 복구하고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과제를 수행하였다(이택선 2012, 327). 즉, 관계에 남아 있었던 세력들이 여당인 자유당과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과제를 책임지게 되었다면 1950년대 중반부터 신진회 등의 진보정당 설립을 추진하였던 진보세력은 사상계와 야당으로 진출하여 한국의 시민사회 건설을 주도하며 민주화 추진의 주역이 되었다.¹⁴⁾ 결론적으로, 조선민족청년단 중 보수 세력이 중심이 되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진보세력이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던 것이다(이택선 2012, 327).

3. 조선민족청년단 출신들과 국가안보, 그리고 산업화: 1960년대~197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민족청년단 출신들 중 산업화를 이끈 대표적 인물들로는 백두진과 송정범, 태완선, 그리고, 유창순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백두진과 송정범, 유창순은 조선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미군정의 조선민족청년단의 자금 지원을 담당했었고 태완선 역시 조선민족청년단 내부에서 자금담당 책임자로 일했었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용원(1999, 25)에 따르면 유창순과 태완선은 민주당 시절 장준하가 발행하던 사상계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장준하는 이들의 권유로 민주당의 국토건설사업에 관여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족청시절의 인연은 가장 큰 요인들 중 하나일 것으로 짐작된다.

1956년경 당시 20%의 공무원이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었는데 이후 이들은 5·16 이후 1955년 당시 70%가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군부세력과 함께 본격적으로 근대국가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¹⁵⁾ 대표적인 군부 내 족청인사로는 국방부 장관을 지낸 최영희와 참모총장을 지낸 노재현, 그리고, 5·16 주도세력이었던 박임항과 박병권 등을 들 수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한 ‘1961년부터 1963년까지의 미국의 대외관계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14) Ibid., 652-654쪽.

15) Ibid.

5·16 발생 약 25일 전인 4월 21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를 전복시키려는 2개의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2군 사령관인 박정희가 주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직을 이범석이 이끌고 있으며 쿠데타 계획이 한국군 전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⁶⁾ 이들 두 세력은 이후 5·16 주체세력이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을 경계하여 ‘족청계 반혁명 사건’을 일으키자¹⁷⁾ 이범석과 일부 조선민족청년단 세력이 야권에 몸을 담은 등 갈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시절에 이범석은 조선민족청년단 시절의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던 백낙준과 협력¹⁸⁾하여 윤보선, 유진오, 백낙준과 4자회담을 통해 야당통합과 대통령후보단일화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먼저, 백두진은 5번의 국무총리직과 국회의장, 그리고, 재무부장관을 역임하며 한국의 대표적 지배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았다. 미군정의 조선민족청년단에 대한 자금 지원은 미군정의 스미스(R. C. Smith) 해군소령이 총재로 있었던 조선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주요 책임자가 백두진이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범석의 신뢰를 얻게 된 백두진은 외자청장과 재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임명되기에 이른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전반에서 족청이 제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¹⁹⁾ 이승만의 총애 속에서 한미경제 합동위원회의 한국 측 대표의 자리를 고수하였다. 이후, 백두진은 1967년 국회의원이 되어 공화당 정권을 위해 일하게 되고 1970년대에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새롭게 부상한 신진 관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백두진 1975).

조선민족청년단의 자금을 조선은행에서 지원했었던 실무담당자 송정범 역시 외자도입과 경제개발계획 입안,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에 관여하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제1공화국에서 부흥백서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그는 조선민족청년단 몰락 이

16) U.S. Department of State, 1991, "217. Memorandum From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Dulles to President Kennedy, Washington, May 16, 196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1-1963, Volume XXII, Northeast Asia*.

17) 서영훈(2004/05/06)의 증언에 따르면 5·16 주도세력은 이른바 족청계를 경계하여 이범석의 측근인 김정래 등이 5·16을 비판하는 것을 문제 삼아 재판에 회부하고 반혁명 혐의로 10~1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18) 이는 이범석(1971, 3) 참조. 백낙준은 서문을 통해 이를 기술하고 있다.

19) 당시, 홍진기의 회고에 따르면 족청계로 몰리면 정부에서 설 자리가 없는 때였고 자신 역시 갈홍기, 양우정 등과 친한 족청계로 모함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유민·홍진기 전기 간행위원회 1993, 117).

후에도 부흥부의 경제기획국장과 조정국장을 지냈다(이임광 2012, 60, 110). 그리고 이후 미국 연수를 통해 구미의 후진국 경제 개발론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개발계획을 흡수하여 경제개발입안의 능력을 갖추게 된²⁰⁾ 그는²¹⁾ 5·16 이후 과도정부에서도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던 송요찬과 혁명주체위원회의 박정희 의장을 보좌하여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부원장 겸 차관으로 근무하였다.²²⁾ 이후, 주미공사²³⁾와 국제부흥개발 교체 이사로 일했었던 송정범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본금을 들여 박정희 정부가 출범시킨 한국도로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서울경제신문 1969/02/04).

다음으로 제2대 국회의원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던 태완선은 족청계 몰락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그리고, 부흥부의 장, 차관과 상공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5·16 이후에는 이범석 등의 족청계 인사를 야당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범석이 박정희 정권과 화해하던 1970년대에는 그 역시 건설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지내며 경제발전을 주도하였다. 이후, 말년에는 백두진과 마찬가지로 유정희 의장으로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가치에 몰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창순 역시 조선민족청년단이 조선은행의 지원을 받을 때 주요 책임자로 인연을 맺었다. 유창순은 조선민족청년단의 전성기와 몰락기였던 1950년대에는 한국은행 동경지점장과 뉴욕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그러다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부흥부 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로 활동하게 된다. 그의 성공은 5·16 이후에도 이어져 한국은행총재와 상공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등을 역임한다. 이후, 롯데제과 회장 등을 지내며 민간 기업에서 일했었던 유창순은 1980년대에도 국무총리 서리와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거치며 재계와 관계를 넘나들며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결론적으로 관계와 정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이들은 족청이 제거되고 자유당이 몰락된 이후에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의 요직에서 맹활약하였다. 특히, 이들이 국가건설의 과제 중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은 경제발전 부분이었고 말년에는 국가안보의 과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중시한 경우가 많았다.

20) 이에 대해서는 역사비평 편집위원회(2000, 259; 2009, 301)를 참조할 것.

21) 박태균(2000, 32-33)에 따르면 송정범은 구미의 경제 개발론을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번역, 소개하기도 하였다: 턴버젠(Jan Tinbergen) 저, 박희범·송정범 역, 1958. 『경제개발의 설계론』.

22) 이에 대해서는 김상선 외(2010, 125, 141) 참조.

23) 총무처, 1962, “정부인사발령(공사임명발령(송정범) 주미대사관)(제86회).”

4. 조선민족청년단 출신들과 민주화: 196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조선민족청년단 출신들 중 1960년대-1970년대 민주화에 공헌한 인물들로는 장준하와 부완혁, 김철 등을 들 수 있다. 이어,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김정례와 이희호가 여권을 신장하고 한국의 민주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였다. 특히, 이들의 활동은 족청시절의 인연이 바탕이 된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간에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예로 후술할 김철과 김정례, 이희호와 김정례, 그리고 이희호와 서영훈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박경수(2003, 225-226)에 따르면 김구의 비서 시절부터 이범석과 인연을 맺었던 장준하는 조선민족청년단의 2대 교무처장으로 근무할 정도로 초창기 관계가 깊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장준하는 이범석이 이승만 정부의 핵심세력이 되자 조선민족청년단과 결별한다.²⁴⁾ 그리고 1953년 4월 사상계를 창간하여 양호민, 차기벽 등 당대의 지식인들과 함께 시민사회를 이끌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사상계의 마지막 발행인이었던 부완혁은 다름 아닌 조선민족청년단을 통해 연결된 인연이었다. 부완혁은 조선민족청년단 출범 초창기부터 관여하여 이범석이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비서관으로 파견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었다.²⁵⁾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 1기생 출신으로 이범석의 총애를 받아 중앙훈련소 교무처 편집실 실장을 맡았었던 김철은 통일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의 혁신정당을 이끌었다(후지이 다케시 2012, 169-170). 김철은 서영훈 등과 함께 보라매 동창회 등을 통해 족청 1차 해산결정 때에도 족청의 독자성을 지키려고 했었다(후지이 다케시 2012, 222-224). 이후에도 김철은 원외자유당이 결성되었을 때 서영훈을 비롯한 중앙훈련소 1기생 출신들과 이범석의 측근이었던 여성 7기 훈련생 김정례 등과 행동을 같이하였으며 이범석은 제거하되 족청은 흡수하고자 했었던 이승만의 의도에 따라 족청 세력이 여전히 중용됨에 따라 자유당

24) 이에 대해서 재일 통일운동가로 자서전 『찢겨진 산하』의 저자인 정경모는 장준하가 광복군 시절부터 줄곧 함께 해 온 이범석의 '조선민족청년단' 산하에서 계속 일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그의 증언(정경모 2009/07/09)에 따르면 장준하는 이승만의 족청해산령에 의해 족청이 몰락하게 되자 김구 암살과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상계를 창간하게 되었다.

25) 부완혁은 이범석에 대해 강직하고 통찰력이 있었지만 모사꾼 같은 센스가 결여되어 있어 이승만이 족청을 없애버리려는 꾀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이경남 1987/09/23).

의 선전부 차장 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후지이 다케시 2012, 432, 434, 439). 그리고, 김철은 제5공화국 시절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참여하기 위해 출국할 때에 조선민족청년단 시절부터 남매처럼 지내던 인연을 바탕으로 여당소속이었던 김정례의 도움을 받아 여권을 얻기도 하였다(남재희 2013/11/23). 족청이 해산된 지 이미 수십 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역시 족청을 수호하려고 했던 시절의 유대감을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80년대에는 1947년 조선민족청년단 여성부 조직책으로 출발하여 이희호와 같은 여성 훈련생 출신으로 이희호 스스로가 족청시절을 직접 거명하며 절친한 친구로 기술한 김정례(이희호 2008, 38)가 민주정의당 정권에서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한 후 한국에 여성단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동아일보 1981/04/02). 김정례는 이범석의 측근으로 족청계 반혁명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62/05/03).

무엇보다도 1990년대에는 조선민족청년단 여성 첫 훈련생 7기 출신의 이희호가 정치적 동반자였던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민주화의 과제를 성취하였다. 당시 조선민족청년단에서 함께 활동했었던 서영훈의 회고를 빌려서 이희호가 직접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희호는 조선민족청년단 여성반의 핵심이었다. 이희호는 단장이었던 이범석이 배석한 '민족청년단' 여성반 간부들 우이동 훈련 수료식에서의 연극행사에서 여주인공 역할을 맡을 정도였다(이희호 2008, 32). 아울러 서영훈 역시 김정례, 강영훈 등과 함께 이범석을 추모하는 철기기념사업회의 회장직 등을 함께 역임하면서 직접 후기를 기술하여 장준하와 김철이 족청 설립초기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지적할 정도로 조선민족청년단에 강한 애착을 느끼는 인물이었다(이범석 1994).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선민족청년단은 단시간 내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사회전반으로 전파하고 근대 민주국가 건설의 근간이 되는 시민사회 형성의 기초를 닦고자 하였던 미군정의 지원에 힘입어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공식해산령을 전후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반공의 가치만을 전파하는 극우 단체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후지이 다케시(2012)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민족청년단이 이승만의 독재를 후원하는 극우단체로 변질되어 민족주의적 대의명분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측면을 상실해가다가 정치무대에서의 주도권마저 잃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이범석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이범석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조선민족청년단 지원 역시 단기간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조기 철수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시키기 위한 지도세력 양성을 목표로 이범석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청년단을 지원하였지만 이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임시방책이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점차 이범석 세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조선민족청년단 관련 세력들과 인적자원들로 관심을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의 역사는 절반의 성공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즉, 조선민족청년단에 몸담았던 이들 중 백두진과 송정범, 유창순 등의 인사들은 산업화 달성의 주역이 되었다. 이에 비하여, 장준하, 부완혁, 김철 등은 민주화 세력의 중심이 되었다. 이후, 조선민족청년단의 흔적은 1980년대 김정례 등을 통해 그 명맥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이희호가 국민의 정부 수립을 통해 한국에 진정한 민주화를 꽃피운 주역이 되었다.

하지만, 미국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건설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한 재조지은(再造之恩)의 나라로 간주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고 철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선민족청년단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도움과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분명히 한국에 큰 도움과 영향을 주었지만 한국의 내적 역동성이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건설을 주도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던 것처럼 송정범의 경우를 들어 미국에 의존한 학습과 모방기를 거쳐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입안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음을 지적하여 미국의 영향보다는 한국인 관료의 내적역량을 강조한 박태균(2000)의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백두진(1976) 역시 다음의 진술을 통해 1960년대 이후의 우리 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자주적 노력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다.

26)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이범석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이승만으로부터 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지적한 김일영(2002)을 참조할 것.

건국 초기 자유당 정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지향이 주로 미국을 의존해서 민주화를 이룩해 보려는 모방이었다면 5·16을 계기로 일단 실패로 돌아간 모방의 체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자주성을 지향하게 되었고 우리 실정에 알맞은 제도적 정착을 시도하였다(백두진 1976, 8).

이와 함께, 조선민족청년단의 일부가 경제발전에 공헌하였고 민주화의 과제를 수행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조선민족청년단 전체를 미화하거나 한국에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국가건설이 완결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이희호, 김철, 장준하, 부완혁 등처럼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경우도 있었지만 백두진(1978, 30-32)처럼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들어서 체제를 옹호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최고 지도자 개인까지 적극 찬양함으로써 민주화에 역행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백두진 1972).²⁷⁾

즉, 경제성장을 주도한 이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은 국가의 예측적 동반자인 경우가 많았고 부르주아지 역시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 성장하여 국가의 노동탄압 정책과 특혜금융 및 세제 등의 친 자본적 정책의 수혜자였다. 따라서 박광주(1992, 353-354)의 지적처럼 한국의 부르주아지는 그 성장과정에서 도덕적 흠결을 지니게 되어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일정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로부터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 서구의 부르주아지와 같은 헤게모니를 지닐 수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 미국에 의해 갑자기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국가에 의해 부르주아와 시민사회가 인위적으로 양성됨에 따라 정치적 정당성의 강한 헤게모니를 지닌 부르주아와 시민사회가 국가건설을 주도하였던 서양의 경우와 같은 국가건설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가건설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최장집(2005)의 지적처럼 민주주의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도입시기부터 위기를 맞았던 자유민주주의 역시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분단 상황 속에서 국가가 스스로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를 건설하고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부르주아와 시민사회를 만들어야만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27) 『백두진 국회의장 연설문집』(1973)에 재수록, 185-186쪽.

투고일 2014년 04월 22일

심사일 2014년 05월 09일

게재확정일 2014년 05월 29일

참고문헌

I. 1차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편역. 2003.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의 당내 정세에 대한 정보자료, 김영준.” 『러시아연방 국방성 중앙문서 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46~1947』 VIII. 러시아연방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문서군 172, 목록 614632, 문서철 41 8(1947년 11월 25일).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대한민국 편.” <http://www.history.go.kr/>(검색일: 2014년 1월 6일).
- 박종효 편역. 2010. 『러시아연방외무성대한정책자료 I-II: 1917-1980년 남, 북한 자료 6.25 한국전쟁관련 끄레물 극비자료』. 서울: 선인.
-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편. 1996. 『美軍 CIC 情報 報告書 1: RG319: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서울: 중앙일보 현대사연구소.
- 총무처. 1962. “정부 인사발령 (공사임명발령(송정법) 주미대사관) (제86회).” 국가기록원.
- 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HQ, USAFIK). 1989. *G-2 periodic report 5*. Chunchon, Korea: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 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HQ, USAFIK). 1990. *G-2 weekly summary 4*. Chunchon, Korea: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이길상 편역. 1990. 『미군정 활동 보고서』 5~6권. 서울: 원주출판사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91. “217. Memorandum From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Dulles to President Kennedy, Washington, May 16, 196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1-1963, Volume XXII, Northeast Asia*.

<신문 및 잡지>

- 남재희. 2013. “남재희 회고 文酒 40년-빠뜨렸던 이야기들 (51).” 『프레시안』(11월 23일).
- 동아일보. 1962. “박의장이 최종 확인한 핵재판결”(5월 3일).

- _____. 1981. “인터뷰 지역구 당선 홍일점 김정례 의원” (4월 2일).
- 백두진. 1976. 기고문. 『유신정우』 9월호, 1~13.
- 서영훈. 2004. “나의 이력서, 서영훈(12) 오월.” 『한국일보』(5월 6일).
- 서울경제신문 1969. 무기명 기사. (2월 4일).
- 이경남. 1987. “청년운동 반세기: (9)서북청년회.” 『경향신문』(1월 7일).
- _____. 1987. “청년운동 반세기 (40)조선민족청년단.” 『경향신문』(8월 12일).
- _____. 1987. “청년운동 반세기 (41)조선민족청년단.” 『경향신문』(8월 19일).
- _____. 1987. “청년운동 반세기 (42)조선민족청년단.” 『경향신문』(8월 26일).
- _____. 1987. “청년운동 반세기 (44)조선민족청년단.” 『경향신문』(9월 9일).
- _____. 1987. “청년운동 반세기 (46)조선민족청년단 [7] 우남, 철기에 진로 택일강요.” 『경향신문』(9월 23일).
- 정경모. 2009. “‘사상계’ 미 CIA 대변지에서 반독재 정론지로.” 『한겨레』(7월 9일).
- 조선일보. 1946. “광복군 참모장 이범석 귀국.”(6월 5일)

<회고록, 논설집, 구술>

- 박경수. 2003.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서울: 돌베개.
- 백두진. 1972. “내가 본 박정희 대통령-가장 성공적인 지도자.” 『세대』 7월호.
- _____. 1973. 『백두진 국회의장 연설문집』. 서울: 국회도서관.
- _____. 1975. 『백두진 회고록』. 서울: 대한공보사.
- _____. 1978. “민족의 생존, 그리고 자유와 평등.” 『국회보』 5월~6월호(164호), 30~32.
- 유민·홍진기 전기 간행위원회. 1993. 『유민 홍진기 전기』. 서울: 중앙일보사.
- 이범석. 1971. 『우등불』. 서울: 은상사.
- _____. 1994. 『민족과 청년: 이범석 논설집』. 서울: 백산서당.
- 이임광. 2012.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을: 대한민국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린 회남 송인상 이야기』.
서울: 공감의 기쁨.
- 이희호. 2008. 『이희호 자서전 동행: 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 서울: 웅진하우스.
- 조용중. 2004. 『대통령의 무혈 혁명: 1952 여름, 부산』. 서울: 나남.

II. 2차 문헌

- 구대열. 1995.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 서울: 역사비평사.
- 김상선·김석준·김영섭·금동화. 2010.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서울: MSD 미디어.
- 김세균. 2005. “제6장 국가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일영. 2002. “전쟁과 정치.” 유영익·이채진 공편. 『한국과 6·25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행신. 2004. 『해방정국 청년운동사』. 서울: 선인.
- 노재봉. 1985. 『사상과 실천: 현실정치인식의 기초』. 진주: 녹두.
- 박광주. 1992. 『한국권위주의 국가론』. 서울: 인간사랑.
- 박상섭. 1985a. 『국가권력과 계급권력: 현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논쟁』. 서울: 한울.
- _____. 1985b. 『자본주의 국가론: 현대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의 전개』. 서울: 한울.
- _____. 2012. 『국가, 전쟁, 한국』. 고양: 인간사랑.
- 박찬표. 200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냉전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08. “해방과 국가형성.” 한국정치학회 편.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7: 한국정치』. 파주: 법문사.
- 박태균. 2000. 『1956-1964년 한국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2000.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2009.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근현대』. 서울: 역사비평사.
- 이경남. 1989.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상, 하』. 서울: 삼성개발.
- 이용원. 1999. 『제2공화국과 장면』. 서울: 범우사.
- 이정식. 2006. “해방 직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이정식 저. 『대한민국의 기원: 해방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와 민족 지도자 4인의 정치적 궤적』. 서울: 일조각.
- 이택선. 2012.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형성과정(1945~50년).”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임종명. 1995. “조선민족청년단(1946. 10~1949. 1)과 미군정의 ‘장래 한국의 지도세력’ 양성정책.” 『한국사연구』 95호.
- _____. 2012. “해방 직후 이법석의 민족지상, 국가 지상론.” 『역사학연구』 45권.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하영선. 1992. “냉전과 한국.” 하영선 편. 『한국전쟁의 새로운 접근: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서울: 나남.
-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발표회 연구논문집』. 서울: 한울.
- 후지이 다케시. 2012.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족정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8년사』. 서울: 역사비평사.
- Art, Robert. J. 저. 김동신·이석중 역. 2005. 『미국의 대전략: 외교정책과 군사전략』. 파주: 나남출판.

- Cohen, Jean L.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 MIT Press.
- Dobbins, James, Seth G. Jones, Keith Crane, and Beth Cole Degrasse 저. 임을출 · 손희경 역. 2011.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가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 파주: 한울.
- Henderson, Gregory 저. 박행웅 · 이종삼 역. 2000.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한울.
- Keane, John.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Verso.
- Schnabel, James F. 1996.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1945-1947*. Washington, D.C.: USGPO.
- Timbergen, Jan 저. 박희범 · 송정범 역. 1958. 『경제개발의 설계론』. 서울: 동아출판.

ABSTRACT

Korean Youth Corps and South Korea's Development as a Modern Democratic State

Taek Sun Lee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uth Korea's development as a modern democratic state while focusing on the Korean Youth Corps. Emerging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Korea lacked the two main building blocks of a democratic society: the bourgeoisie with the hegemonic power of a ruling class and a civil society with political legitimacy. The United States, as much as it wanted to pull out from Korea, had to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s demand that a democratic state be built. Thus the U.S. supported the Korean Youth Corps, which played a major role in quickly spreading the U.S. standards of a modern state throughout Korea. From the 1960s and onwards, both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groups that had branched out from the Korean Youth Corps actively participated in nation-building, achieving goals such as national security,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However, while the support from the U.S. initiated the nation-building process, it did not last long. In fact, such progres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f not for the South Koreans that took up leading roles even after the support from the U.S. had been cut off. Yet many of these leaders could not obtain political legitimacy despite their contributions and democracy could not fully take root in Korea. Thu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rocess of building a modern state is still ongoing.

Keywords: Korean Youth Corps, Modern Democratic State, civil society, political legitimacy, Korea-U.S relations